

얼마전 수업 시간에 성폭력 관련 사과를 담당강사(이하 선생님)에게 받아야만 했던 적이 있다.

그 사건의 경위, 학생들의 태도 등등은 제쳐두고,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여학생처의 폭력아닌 폭력을 말하고 싶다.

사건의 발단은 한 학생이 총여학생회 관련 홈페이지,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성폭력 관련 글을 적은 것에서 비롯된다.

이 익명의 글을 여학생처는 접수를 했고, 그뒤 선생님에게 <<공문>>을 발송했다.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략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으며, 그래서 아주 형식적이지만 선생님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사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는 글이었다.

여기서 내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여학생처의 일 처리 과정이다. 분명 여학생처에서 <<공문>>을 보내기 위해서 <<익명 게시판>>의 글을 그 근거로 삼았다.

과연 익명 게시판의 글을 공문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?

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.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생각해서 익명 게시판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,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저변에선 분명 그 글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 뜨리고 있는 것이다.

그렇다면, 이 글을 접수했던 여학생처의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옳았을까?

방송국에서도 익명의 제보를 받으면 그 사건의 전말을 알기위해서 최소 취재정도는 한다. 취재는 좀더 공정한 자료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. 그러나, 여학생처의 경우는 취재를 하지도 않고 바로 선생님에게 <<공문서>>를 보냈다.

즉, 공적이지못한 익명 게시판의 글을 근거로 공문서를 만들어낸 과오가 생긴 것이다.

익명의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, 공문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한다. 그러나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<<공문서>> 먼저 톡하니 보낸다면, 그걸 받아들이는 선생님의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러울 것이 자명하다.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당혹을 넘어서 위협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. 분명, 그 <<공문서>>에서는 선생님을 <<성추행 용의자>>격으로 대하고 있다.

선생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<<공적인 문서>>를 수업시간에 읽어야만 했다. 그것도 하나의 절차였다. 그외중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상황을 알게 되었으며, 동시에 수업의 분위기는 싸~해져 버렸다.

이건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. 서투르고 별 생각없는 <<공문서>>의 발급으로 인해서,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.

또한,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로서도 문제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수 없다.

공문서는 분명, 공식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개인으로서는 일단은 부담으로 작용하며, 공식적인 근거를 항상 기반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. 또한 그 내용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채, 정해진 틀에 의한 글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.

다시 말해, 형식에 맞춰 보내는 것이 공문서는 아닌 것이다.